

권/두/대/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8년 5월 3일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초청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권두대담을 개최하였다. 본 대담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특징, 북핵문제의 합의 사항, 한국경제에의 영향 및 효과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본문은 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토론 내용을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일(목) 오전 10시, 더플라자

사회

이석(KDI)

초청 토론자

조동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시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장님께서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의의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동호: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문점선언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직 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남북정상이 이러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시점상 위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불과 작년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이 불거질 만큼 남북·북미 간의 대립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대립이 고조되었던 시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냈으며, 이러한 국면 전환을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한반도 운전자론이 거론될 때에는 우려의 시선이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우리 정부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은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판문점선언에 명기하여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도 큰 의의를 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동북아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동북아 정상회담 르네상스’를 가져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이것이 한중일, 한미, 북미, 북중, 더 나아가 북러, 한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3자 또는 4자 회담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상회담 르네상스’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 영역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진부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 유일한 남북한 냉전 구도가 실질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상징하는 부분이다.

한편,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의 다른 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상회담의 시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¹⁾ 또는 말에²⁾ 개최되었기 때문에 정책이 탄력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 취임 1년 내에 개최되었고, 이번 가을 이미 두 번째 정상회담까지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임기 중 여러 번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현 대통령의 임기 초에 개최됨으로써 추후 남북한 정상이 합의문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둘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 또는 정책 실현의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과였다고 본다.

둘째,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도 지난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1, 2차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과거 북한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니 이번에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회담이 개최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됨으로써 더욱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셋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밀담’을 통해 두 정상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난 1, 2차 정상회담과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합의문에 대한 발표이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육성으로 생중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합의 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이를 통해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성과를 얻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합의문 이행 의지를 담보하는

1) 2000년에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반(3년 차)에 평양에서 개최됨.
2) 2007년에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5년 차)에 평양에서 개최됨.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정상회담 이후 『노동신문』에 판문점선언 전문을 이례적으로 게재하였다.

이석: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상회담 르네상스’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 냉전 구도가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지난 1, 2차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특징적인 부분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북핵문제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매우 크지만 우리 사회와 미국의 일부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여전히 미진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북핵 관련 합의들과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조동호: 일각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두고 미진하다 또는 과거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본인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내 일부 보수나 미국의 일부 보수에서 이번 북핵문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두고 미진하다는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비핵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지, 비핵화 내용이 왜 합의문 첫머리가 아닌 끝에 나왔는지 등의 견해가 있는데, 이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설전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 할 사실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남북정상의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하였다. 만약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면 일부 보수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처음으로 명기되었다는 점은 이번 합의 결과가 과거에 비해 미진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결과이다.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반추해보면,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마찬가지로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남겨주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본다. 셋째, 합의서의 체결 주체가 실무책임자에서 남북정상으로 격상된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합의 주체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합의 주체 또한 차관보급이었다. 즉,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주체는 과거보다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주체로서 직접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고려하면 결코 그 내용이 미진하다거나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여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다시 속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에 대해 저는 응답했다. 우리는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속은 것으로 따지자면 한국만큼 속은 나라가 있느냐. 당한 것으로 따지자면 한국만큼 당한 나라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겠는가. 비슷한 식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더이상 분단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롭게 살고 싶는데 마침 북한이 과거와 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니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길로 가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훗날 우리가 북한에 또 한번 속거나 또는 기만전술이었다고 느낄지라도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점이다. 북한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여 전문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을 것이며 핵동결의 의지를 보였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진일보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풍계리 핵 실험장 이외에 또 다른 핵 실험장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핵 실험장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해야 한다. ‘남남갈등’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미흡하며,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지식인, 정치인, 언론 그리고 정부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를 떠나 희망과 추측에 의존한 발언은 자제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담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석: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과거에는 실무자 차원의 비핵화 합의 이행이었다면, 지금 양국 정상에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한 것은 분명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해주셨다. 더 나아가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크게 변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북한리스크가 없어지거나 크게 감소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상회담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서는 경제학자로서 현재와 향후의 한국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조동호: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변화가 보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변수가 존재하지만 가정을 해보겠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났고 비핵화에 합의를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문구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이 바로 다음날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수순으로 이루어 나갈지부터 시작될 비핵화 과정이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에, 빠르다고 해도 1~2년 정도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대응이 이루어진 이후 완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쉽게 당근을 내어줄 것 같지 않다. 이는 한국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대화인 만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제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순차적으로 풀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간단한 교류부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해제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까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북한의 자세와 연관이 있다.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제협력에 대한 수요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 조치로 병진정책을 경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대외환경 개선에 따라서 외국 투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 또한 그러한 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북한이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구상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북한 역시 이를 따르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간적 상황이나 북한의 자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남북경협이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낙관적인 평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이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어느 한 부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또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한국경제의 어느 부분에서 조달할 것인가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종합해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간의 교류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이 크게 논의되지 않았고, 지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자는 정도로 경협에 대한 논의가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 역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경협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남북경

협이 구체적인 아이템, 즉 과거의 경험 아이템이 유지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질 것인지, 또한 큰 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방향성의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동호: 어려운 이야기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경협을 논할 때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정부만의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나들섬 활용 방안, 박근혜 대통령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현 정부만의 남북경협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왜 남북경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제고하며, 북한을 시장경제로 견인하여 통일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에서 남북경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험 과정에서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설령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을지라도 정치적·민족적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개입과 정부지원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남북경협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써 개성공단을 살펴보자. 한국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버팀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 국민인데 왜 그들의 최저임금과 노동3권이 논의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근거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임금의 1/10 수준이었고,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11시간이었다. 매일 2시간씩 야근하고 토요일에도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다. 북한 노동력에 대한 과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북한 노동력 부족 사태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수익을 많이 낸다면 임금의 50%를 인상하는 기업도 있는 것이 당연할텐데 어째서 한국정부는 매년 정부가 나서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지 묻고 싶다. 남북경협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통일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특수한 관계이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 한국의 기반을 다지고, 남북 간 정상 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수 북한 진출 기업의 경영이익이 아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각으로 남북경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경협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초창기 남북경협은 우리가 당면한 환경에 비해 더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경협의 물꼬를 트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경협의 물길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길로 남북경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석: 이번 정상회담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예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몇 주 앞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조동호: 일단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첫째, 앞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완화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합의에 이르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로 북한의 체제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 체제 구축은 미국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종전, 더 나아가 평화 협정,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석: 원장님께서 북한경제를 연구하시는 경제학자이시지만 북한 및 한반도와 관련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원장 소임을 맡고 계신다. 원장님께서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학계 또는 연구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조동호: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경제학자들이 정치 환경에 좀 더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 경제학자들이 정치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를 하겠다는 뜻에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도 함께 한다. 적어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정치 문제를 알아야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있고 정치적 제약이 있는데 현실과 결여된 정책조언을 한다면, 연구자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라도 정부 당국에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책연구를 하는 이유, KDI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가로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고민을 하는지, 제약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되어야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다. 국제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북한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최근 학문 간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아울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한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연구가 총론을 넘어 각론으로, 즉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KDI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역, 시장, 환율 등에 대해 분석해 온 것은 학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 방식이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보편화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는 사실 총론적인 분석이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각론적인 연구가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차세대 연구자들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회와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방법도 있다. 개인적, 조직적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화해·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북한에 대해 연구해야 할 분야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와 차세대 연구자가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활성화되고, 차세대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청에 응해주신 조동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